

# 도산역, 기준치 50% 초과...지하철역 초미세먼지 잡아라

### 내일부터 전국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광주 지하철 역사 돌아보니

#### 하루 평균 농도 77 $\mu\text{g}/\text{m}^3$ 로 기준치 50 $\mu\text{g}/\text{m}^3$ 초과...취약 구조 대책 마련 절실 다른 역들은 기준치 이하...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확대·앱 등에 공개

30일 오후 1시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도산역' 승강장. 이날 도산역 승강장 내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54 $\mu\text{g}/\text{m}^3$ 로, 환경부의 지하철역 초미세먼지 기준(50 $\mu\text{g}/\text{m}^3$ )을 넘어선 수치였다. 환경부는 이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즉각적인 공기질 개선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기준치를 넘어선 사실조차 몰랐다.

도산역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 기준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77 $\mu\text{g}/\text{m}^3$ 에 달했다. 정부 환경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인 만큼 하루 평균 이용객만 1300명을 육박하는 이용객들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만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30일 전국 지하철역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전격 공개하면서 광주를 비롯, 전국 지하철역 내 공기질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민들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 만큼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에어)으로 전국 지하철역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기로 하고 30일부터 시

험 가동중이다.

광주도 도시철도 1호선 20개 역 중 지상에 위치한 2곳(평동·녹동)을 제외한 18개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지하철역 내부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다.

광주일보가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광주지역 18곳의 지하철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 결과, 도산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의 평균 농도는 22.1 $\mu\text{g}/\text{m}^3$ 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도산역의 경우 오전 11시 기준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4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가 오후 1시에는 54 $\mu\text{g}/\text{m}^3$ 까지 올랐다.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오전 11시에는 77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1시에는 71.8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인근 광산구 평동의 대기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1시에 65 $\mu\text{g}/\text{m}^3$ 에 달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공기청정기와 공기여과설비까지 개량, 설치했는데도 공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역

(34 $\mu\text{g}/\text{m}^3$ ), 농성역(31 $\mu\text{g}/\text{m}^3$ ), 운천역(27.5 $\mu\text{g}/\text{m}^3$ ), 학동중심사역(24 $\mu\text{g}/\text{m}^3$ ), 공항역·쌍촌역·돌고개역·양동시장역(23 $\mu\text{g}/\text{m}^3$ ) 등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비슷한 시각, 초미세먼지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남광주역(8.2 $\mu\text{g}/\text{m}^3$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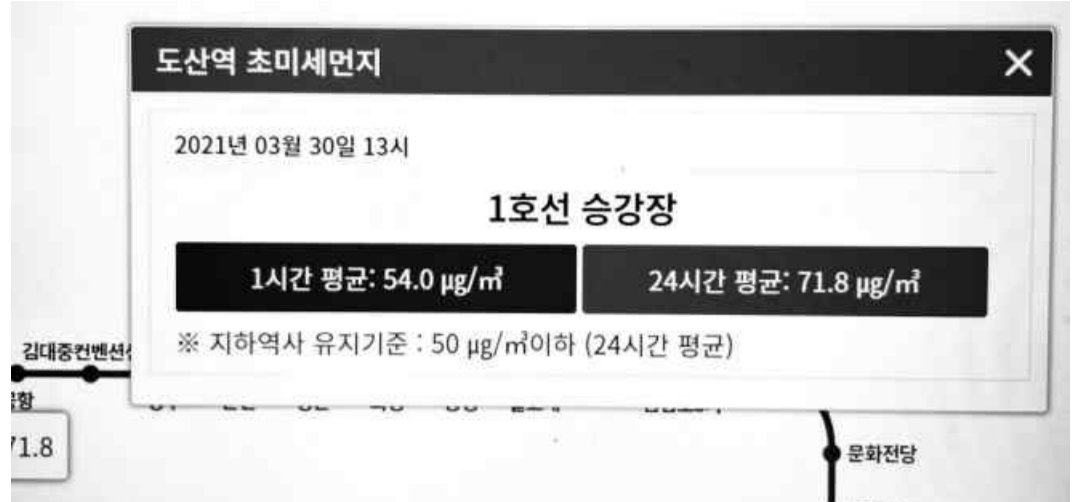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도 도산역의 공기질 수준을 파악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부터 지하철 승강장까지 바로 이어지는 반 밀폐형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외부 공기가 지하철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역 내부 공기질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하철역 공기질 실시간 공개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역사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역사 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모든 전동차 내부에도 울 상반기까지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해 2024년까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질환과 천식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심혈관 질환인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한다"면서 "지하철 역사는 구조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0일 시범 공개된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도산역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 기준(50 $\mu\text{g}/\text{m}^3$ )을 넘어선 것(위)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도산역 내부 모습.

## 서구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무리 1000명'

### 광주시 감사위 특정감사 마무리 구의원·공무원 외 일반시민까지 서부경찰, 즉각 수사 착수

무리 1000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광주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의원, 공무원, 이들과 인맥 관계로 얽힌 특정인들이 반칙과 특혜 관행을 내세우며 지역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서부경찰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광주시 서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서구청 주·정차 과태

료 부과실태 특정감사'를 마무리한 결과, 부당하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이들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 넘도록 특정감사를 실시, 이같은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위는 서구의원, 공무원, 가족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 있는 일반시민들로 조사를 확대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는 게 서구와 서구의회측 설명이다.

일반 시민들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서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결과를 내놓은 것에 견줘 대상자가 훨씬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실하게 조사했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서구청은 현직 구의원 2명(3건), 5급 공무원 8명(10건), 퇴직공무원 14명(18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원·기간제 16명(20건) 등 총 70명이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부경찰도 30일 서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로 무단 삭제와 관련, 본격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광주시 감사위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대석 서구청장은 당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주시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채용 대가 금품 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검찰 송치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규직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의 전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자녀의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A씨에게 건넨 돈을 건넸으나 정교사 채용을 포기하고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졌다. A씨는 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당사자가 거절하면서 배임수재미수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안전 소홀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 사라지나

### 7월부터 산재 사망사고 유발 뎀 형량 최대 10년 6개월

#### 대법원 양형 기준안 확정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54)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 18일 광주시 광산구 사암로 철거공사 현장에서 7m 높이의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진 50대 노동자 D씨 사고와 관련, 작업 과정에서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묻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피해 유족들의 불만을 샀다.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이 최대 10년 6개월까지 상향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양형 기준안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6개월~1년 6개월이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여러 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5년 이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징역 10년 6개월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도급인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양형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고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가 반성 기제로 일정 금액을 벌원에 공탁하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후적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